

# 새만금 SOC 예산 복원 반영 집중

## 도-전북 국회의원 간담회... 김관영 도지사, 정부 건축재정 기조 속 역점사업 국비 마련 최선

“국회 최종 의결 전까지 지역 정치권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북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2024년 전북 국가 예산 확보 막바지 고삐를 당겼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 전북국가예산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대응 등이 다뤄졌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경우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빨리 정부와 지역 발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 본회의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과 관

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분야에서 종합할 수 있는 최적 인력 배출 대안으로서 서남대 의대 전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건의했다.

이들러 내년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그야말로 초당적 협치 방침도 논의됐다.

11월은 지역 핵심 사업 국비 증액과 신규 반영 등 내년 예산의 마지막 심의 단계여서 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셈이다.

지난 14일부터는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도 가동 중이다. 예산소위는 부처별 예산을 다루는 막강 권한을 갖는다. 현재 15명 예산소위 중 전북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포함돼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 건축재정 기

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열한 예산정국에서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사이좋게 배치돼 든든하고 국회 예산안 마감까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국회의원은 “전북 위기 상황속에 땀땀 뭉쳐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은 당차원에서 잘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없다”며 “지역 의원님들께서 발차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 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위한 명분과 실리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해서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1% 가능성을 믿고 대역전극을 펼친 이차전지처럼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새만금 예산 대책 상임 이사회 복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쉼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북의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은 21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에게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 “새만금 예산 복원 절실”

### 도의회, 국회 예결위 방문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을 갖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1) 의장과 김경기(부안) 새만금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 김성수(고창1)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김승원 위원을 만나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은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포함, 전북 예산안 삭감률(4.7%)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전북 차별”이라며 “게다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새만금 신품종 예산의 89%를 삭감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지난 34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인데도 마치 전북의 사업인 것처럼 치부돼 왔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의 전액 복원이 절실

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큰 예산이고 중요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100% 회복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강훈식 예결위 간사와 김승원 예결 소위 위원은 “새만금 문제는 R&D,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민주당의 3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부총리)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예산관계관들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5일 도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한 뒤 릴레이 단식 투쟁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2차 삭발식 및 껌찔시위를 벌였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전북도의회에서 국회 앞까지 13일간 도의원들이 릴레이 마라톤 투쟁과 함께 11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갖고 새만금 정상화를 요구했다.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서 서거석 교육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작년 전북 비만을 33.4%... 걷기, 비만예방에 도움’

### 강동화 도의원 대표발의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가볍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및 제도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 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걷기 앱 활용에 따른 마

일리지 사용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필요 시 걷기 활성화 사업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2.5%이고, 전라북도의 비만율(표준화율)은 33.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심지어 도내 비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화 의원은 “걷기는 무리한 신체운동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노력자나 고령자, 운동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비만 예방 운동”이라고 언급하며, “건강이 경쟁력인 시대에 걷기 운동이 활성화돼 도내 비만퇴치를 모든 도민이 건강할 전복을 구현하는데 본 조례가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와 소감을 밝혔다.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2.5%이고, 전라북도의 비만율(표준화율)은 33.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김재훈 기자

##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필요 사항 규정

### 임승식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1960~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하여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0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할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

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 가득들이 100%라는 점에서, 한 훈의 의회도 소중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임승식 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에 선구적인 이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결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의 의회도 소중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김재훈 기자

## “암컷 발언” 최강욱 징계 절차 착수하라”

### 민주 혁신계 ‘원칙과 상식’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21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당 윤리심판원에 최강욱 의원 징계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잘못을 솔직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도덕적인 민주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영준 민주당 의원 등 당내 혁신계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짤짤이’ 발언에 이어 이번에도 계속된 최 전 의원의 막말과 현장에서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던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우리당의 도덕성 상실과 성인지 감수성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작년 6월 ‘짤짤이’ 발언에 대한 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칙과 상식’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신속히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짤짤이’ 발언 이후 한없이 지체된 윤리심판원의 징계 유보 행태를 보면 진정성 있는 경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설화를 빨리 정리하려는 다급함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스스

###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4일까지

###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 자체 대책 세워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3일차 일정으로는 총무과 외 10개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다음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3일차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총무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인사를 진행할 때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인사 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하며 “총액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니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관공공사의 장비 및 자재, 인건비 등을 관내 업체 사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분석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니 김제시 자체적으로도 대비책을 세워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만들어 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자원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이동형 무단카메라 등을 확충해 철저히 계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김제시랑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충분히 검토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김제시의 행정의지를 보여달라”며 지적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김제시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곽도태기자